

치솟는 물가에...광주·전남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치

산업물과 물가 상승률 더해 산출 13년 11개월·22년 6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9.5...전국 평균보다 높아

광주·전남지역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7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산업물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내는 걸 말한다. 지난달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였고, 광주도 13년 11개월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울) 국회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9.5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크(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산업물가를 더해 산출한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 산업물은 2.9%였고,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 산업물은 2.2%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지난 2008년 8월(9.8) 이후 13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9.2였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산업물은 2.9%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올해 4월 7.8이었던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에서 6월에는 9.0으로 높아지더니, 지난달 결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다.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물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 폭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역대 최대치이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4), 충북(9.9), 충남(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경남과 충북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충남은 6월(10.0)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두 번째로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했다. 이외 지자체는 강원(9.7), 인천(9.7), 전남(9.5), 광주(9.5), 제주(9.4), 울산(9.3), 대구(9.3), 경북(9.2), 부산(9.2), 경기(9.1), 세종(8.8), 서울(8.8), 전북(8.5), 대전(8.3) 순이었다.

김희재 의원은 "서민·중산층들의 민생고통은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을 외치며 부자만 챙기는 '서민 외면, 부자편향 정부'가 되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국정방향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재원을 빼내 부자들의 잇속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결사

차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를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윤대통령 국정 지지율 6%p 추락 20%대로

NBS, 부정 평가 11%p 올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전과 비교해 6%포인트 감소해 20%대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서울간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격주로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월 3주차 49%, 6월 5주차 45%, 7월 2주차 33%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4주차 34%를 기록해 1%포인트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6%포인트 하락했다.

NBS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20%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전(7월 4주차) 54%에서 이번 조사 65%로 늘었다.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4%(총 5489명과 통화해 1008명이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직권남용·선거범죄도 수사 대상 민주 "국회와 전면전 피할수 없을 것"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던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리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관선'의 개념과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안·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

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며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검정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